

중국 주요 지역의 2014년 경제정책 방향 및 시사점: 상하이 시(上海市)

노수연 아시아태평양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차 례 ● ● ●

1. 개요
2. 주요경제지표 분석
3. 경제정책 방향
 - 가. 지역개발
 - 나. 경제성장
 - 다. 구조조정
 - 라. 사회보장
4. 평가 및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14년 1월 18일~23일까지 6일간 개최된 상하이 시 양회(兩會)에서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스모그, 양로 등의 이슈가 주로 논의되었으며, 지난해와 동일한 성장목표(7.5%)를 제시함으로써 양적 성장보다는 개혁개방 심화를 통한 경제의 내실화가 중시됨.
- ▶ 상하이 시의 2014년 경제정책 핵심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조성이며, 이를 중심으로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업 개방과 투자·무역제도의 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14년은 본격적인 시범구 조성이 이루어지는 첫 해로서 서비스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상반기 중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해 투자를 활성화하며 「자유무역시범구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특히 시범구 지정 당시 발표했던 방안에서 언급된 위안화의 역외 사용 및 자본계정 자유태환,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 등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임.
 - 또한 제도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투자·무역·행정 관리상의 다양한 개혁조치도 시행될 전망이다.
- ▶ 올해 새롭게 강조된 스마트 기술이나 대기오염·고체폐기물 등의 환경, 교육, 문화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새로운 협력 및 진출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음.
 - 올해부터 「제2차 스마트 도시건설 3개년 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이 추진될 전망이므로, 4세대 이동통신망이나 사물인터넷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지원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활용 및 경영조건 강화에 대비해야 함.
 - 교육, 문화 분야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기관의 상하이 교육시장 진출과 해외문화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상하이 로컬기업과의 협력분야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1. 개요

■ 상하이 시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2014년 1월 18일부터 6일간 개최되었으며, 회의 기간 동안 자유무역시범구, 스모그, 양로 등 이슈가 활발히 논의되었음.

- 자유무역시범구 구성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조성방안 제정 현황을 보고받고,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모델과 무역·투자 편의 촉진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함.
- 양회 기간 동안 개최된 주제별 토론에서는 양로문제와 대기오염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되었음.¹⁾
 - 상하이는 중국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인 만큼 양로문제 해결방안으로 민간양로원 설립 활성화, 노인간호전문인력 양성 등이 제안되었음.
 - 또한 스모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상하이 시 정부는 2017년까지 공기질지수(AQI)²⁾를 지금 수준보다 20%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스모그 해소 기술연구와 산업구조조정을 병행할 계획임을 밝힘.

클상자 1. 위치와 개요(2013년)

	· 위치: 중국의 동부 연해지역 · 면적: 6,340km² · 인구: 2,500만 명 · 지역내총생산(GRDP): 2조 1,602억 위안 (중국 내 경제규모 12위, 전체의 3.4%) · 무역액: 3,843억 달러 · FDI(도착 기준): 167억 8,000만 달러 · 한국의 대 상하이시 무역액: 219억 7,000만 달러 · 한국의 대 상하이시 직접투자: 1억 5,000만 달러 · 1992년 푸둥신구(浦東新區) 지정을 계기로 개발·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의 경제수도로 부상 · 중국 3대 경제권 중 창장삼각주(長江三角洲) 경제권에 위치 · 1인당 GRDP 3위, 주민 소비수준 1위로 경제발전수준이 중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임(2012년 기준).
---	---

자료: 위키피디아(그림); 百度(www.baidu.com); 무역협회 중국무역통계DB;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DB; CEIC. (검색일: 2014. 3. 21)

■ 본고에서는 2014년 상하이 시의 「정부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분석하고자 함.

- 「정부업무보고」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주요 업무를 제시하므로, 2013년과 2014년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올해의 경제정책 방향과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상하이 시의 경제를 전망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1) 一财网(2014. 1. 19), 「养老和雾霾成今年上海两会最大热点」.

2) 공기질지수(AQI, Air Quality Index)는 일일 대기오염 정도를 평가하는 지수로서, 값이 클수록 대기오염도가 높음. 일반적으로 AQI가 151을 초과하면 모든 사람이 건강도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대기상태임.

2. 주요경제지표 분석

■ 2013년 상하이 시는 지역총생산, 소비재소매총액 및 가처분 소득 증가율 등 대다수 경제지표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성장률을 달성했음.

- 지역총생산(GRDP) 성장률과 재정수입증가율, 소비재소매총액 성장률이 모두 2013년의 목표치보다 각각 0.2%포인트, 2.3%포인트, 0.6%포인트 상회했음.
- 지역총생산에서 3차 산업의 성장이 두드러져 전년 대비 8.8%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포인트 상승한 62.2%에 달했음.
- 소비재소매총액도 최초로 8천 억 위안을 돌파해 8,019억 위안을 달성했음.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도시등기 실업률은 상한선으로 잡은 수치보다 낮은 상승을 보여 물가와 고용안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도시주민이 9.1%, 농촌주민이 10.4%에 달해 농촌주민의 소득증대가 도시주민보다 더 빠른 속도를 보였으나, 절대 소득격차는 2012년 2만 2,787위안에서 2013년에는 2만 4,643위안으로 8.1% 확대되었음.

■ 2014년 상하이시는 모든 경제지표 증가율의 목표를 2013년 목표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기존의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특히 GRDP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목표치와도 동일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경제성장방침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으로 평가됨.
- 2014년 GRDP 성장률 목표(7.5%)는 2013년 실제 달성한 성장률보다(7.7%)보다 하향조정하고, 재정수입증가율과 도시등기실업률,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지난 해와 동일하게 각각 7.5%, 4.5%, 7.5%로 계획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강함.

표 1. 상하이시의 2013년 경제성과와 2014년 목표

항목	2013년 목표	2013년 실제 성과	2014년 목표
지역총생산(GRDP)(억 위안)	n.a.	21,602	n.a.
GRDP 성장률(%)	7.5	7.7	7.5
소비재소매총액 증가율(%)	8	8.6	n.a.
소비자물가 증가율(%)	3.5*	2.3	3.5*
재정수입 증가율(%)	7.5	9.8	7.5
도시등기 실업률	4.5 이내	4.2	4.5 이내
도시 1인당 가처분소득 증가율(%)	7.5 이상	9.1	7.5
농촌 1인당 순소득 증가율(%)	7.5 이상	10.4	7.5

주: * 2013년과 2014년도 중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는 국가 목표와 동일하다고 표현하였음.

자료: 『解放日报』(2014. 1. 26), 『关于上海市2013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执行情况与2014年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草案的报告』; 商务部(2014. 1. 15), 『2013年上海商品销售总额首次突破6万亿元』.

3. 경제정책 방향

■ 2014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8대 정책과제를 경제성장, 구조조정, 지역개발, 사회보장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상하이 시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며, 환경보호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내용을 강조함.

- 2013년에는 구조조정을 통한 발전을 중시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을 통해 경제발전을 실현할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정부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시범구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하나 서비스업 발전, 대외개방, 제도 개혁 등 경제성장 및 구조조정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자유무역시범구와 시범구 소재지인 푸둥신구(浦東新區)에서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되는 정책과제로 당해 연도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2014년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조성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이에 대한 상하이 시 정부의 중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정부기능의 전환 등 다양한 개혁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국무원이 재량권을 준 국책사업인 <푸둥종합개혁 시범사업>에서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자유무역시범구의 제도혁신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³⁾
- 2013년 10대 과제의 하부 소과제에 불과했던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과제가 올해는 8대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는 등 구조조정에 관한 정책과제가 새롭게 추가됨.
- 주요 정책과제 수가 2013년의 10개에서 2014년에는 8개로 축소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과 관련된 혁신·인재·스마트 등의 과제와 고용·교육 등의 민생 관련 과제가 각각 1개의 과제로 압축되었음.

가. 지역개발

■ 2013년 9월 중국 최초로 승인·발족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의 조성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⁴⁾ 서비스업의 개방 확대와 투자·무역·행정 관련 제도개혁을 주요 목표로 다룸.

- 시범구가 국제 투자·무역 규칙과 연계되면서 중국 내 다른 지역에도 이 모델을 복제해 보급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이 개방을 확대할 경우 참고할 만한 국내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시범구 발족 당시 발표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 내용을 보면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제도를 개선할 계획임.
- 리스크 통제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위안화의 역외 사용 및 자본계정 자유태환, 금리 시장화, 외환관리 영역

3) 浦东新闻(2014. 3. 8), 「2014年浦东综合配套改革试点工作安排」.

4) 2013년 「정부업무보고」에서는 「국가계획에 따라 자유무역단지(自由貿易園區)를 시범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 수준의 언급에 그쳤음.

등에서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자의 진출영역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수정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시범구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임.
- 무역감독관리제도를 혁신해 화물상태별 감독관리모델을 수립하고, 관리감독기능 강화 차원에서 안전 심사기제와 반독점 심사기제, 기업연도보고 공시제도 등도 수립할 계획임.

■ 엑스포 단지·디즈니 단지·황푸(黃浦)강 일대 등 중점지역을 집중 개발하고, 도농통합발전의 일환으로 교외의 신도시와 신농촌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계획임.

- 지난 해 첫 번째 정책과제였던 주요지역개발 목표를 올해도 유지하여 엑스포 단지·디즈니 단지 등 2010년 상하이엑스포가 개최되었던 부지를 개발하고, 난와이탄(南外灘)·베이와이탄(北外灘)·쉬훙빈강(徐匯濱江) 등 황푸강 양측 지역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신도시 건설의 경우 2013년에는 교외 신도시 건설에 치중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했다면, 올해는 도시계획에 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제시하는 데 치중하였음.
- 지난 해에는 쑹장(松江), 자딩(嘉定) 등 신도시 명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교통시스템 완비를 위한 계획을 제시한 반면, 올해는 신도시의 조성원칙을 천명하고 새로운 도시 전체 계획편제를 개시함.
- 신농촌의 경우 곡물, 야채 등 농산물의 공급안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고, 2014년에는 양쯔강 이남 지역의 경치를 활용한 ‘향촌관광’ 발전을 새롭게 제시하였음.

표 2. 2013년과 2014년 상하이 시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지역개발

2013년	2014년
1-1. 중요산업·프로젝트·지역 집중발전, 구조조정과 방식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 *엑스포단지, 디즈니단지, 황푸(黃浦)강 일대 등 중점지역발전	1-1.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 자유무역시범구 실시 주력: 투자·무역제도혁신 강화, 금융개방 확대, 자유무역시범구 조례 제정 추진
3-1. 우선시행(先行先試) 중시, 경제체제개혁 추진, 푸둥중 합개혁시범사업 심화 - 국가계획에 따라 자유무역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	2-1. 국제 경제·금융·무역·해운의 “4대 중심” 건설 가속화, 산업구조조정 추진 - 2013년 1-1의 * 정책 유지
10-1. 도농통합 강화, 교외 신도시와 신농촌 건설 가속화 - 쑹장(松江), 자딩(嘉定), 난훙(南汇), 난차오(南桥), 청푸(青浦), 진산(金山), 충밍(崇明) 등 신도시 개발 및 관련 교통시설 완비 - 식량, 채소 등 식품의 현지생산능력 보장, 수준높은 곡물재배지 3만 무(畝)와, 시설화된 채소밭 8천무를 신규 조성	7-1. 도농통합발전 확대, 교외 신도시와 신농촌건설 가속화 - 산업과 도시가 융합되고, 쾌적한 생태거주환경을 조성하며, 새로운 도시총체규획 편제를 개시 - 양쯔강 이남지역의 경치를 활용한 향촌관광 발전 - 수준높은 곡물재배지 3.5만 무(畝)와 25개 표준화된 과일농원 건설 - 5천 무의 표준화된 수산양식장을 개조해 곡물, 야채 등 농산물의 생산 공급과 품질안전 보장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상하이 시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 「2014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경제성장

■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산업군으로 제조업이나 전략적 신흥산업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은 금융, 해운, 문화창의 등의 서비스업을 중점 육성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 전통상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발전 △ 인터넷 금융지원 등 온라인과 관련된 상업·금융의 발전이 새로 추가되었고, 크루즈경제와 세계관광도시 건설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운과 관련해서는 국내 선적항에서 상하이 양산(洋山)보세항 단지를 거쳐 해외로 수출하는 화물의 경우, 선적항을 떠나는 순간부터 수출로 간주해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선적항 세금환급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 문화창의산업의 경우 융합발전을 강조해 문화를 관광, 스포츠뿐만 아니라 금융, 과학기술, 교육과 융합하고 중국계 문화상품 및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영화TV 제작 및 발행과 관련된 영역의 개방을 확대하는 등 대내외 개방 확대를 강조함.
- 반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소비촉진을 강조하는 일부 다른 지역과 달리 상하이에서는 소비확대가 특별히 이슈가 되지는 않으며, 2014년에는 서비스 소비와 관련해서 관광, 헬스, 체험소비 등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은 “전략적 신흥산업을 발전시킨다”라는 함축적인 언급만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도 2013년에는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전통적인 현지 기간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중국계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중국 여타 지역과의 협력에서 파트너의 지역범위가 일부 축소되었음.

- 2014년에도 △ 헤드쿼터 경제 발전 △ 외국자본의 신기술, 신업종 투자 유도 △ 무역 통관 및 검역 절차 간소화 △ 장삼각지역 협력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2013년에는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과 중국계 금융기구의 해외진출을 유도했다면, 2014년에는 대외투자 심의비준제도 개혁을 심화하고 중국계 다국적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을 강조함.
- 또한 2013년에는 지역경제협력에서 중서부, 동부, 홍콩·대만·마카오 등 다양한 지역과의 협력도 중시한 반면, 2014년에는 상하이시가 속해 있는 장삼각지역 내에서의 협력에 대해서만 언급해 협력 대상 폭이 축소됨.

■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혁신과 스마트를 강조하면서, 상하이의 특징이 접목된 혁신분위기를 조성하고 스마트 도시건설 관련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스마트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함.

- 혁신 주체가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혁신기술 강화와 지식재산권 보호, 자주혁신 시범단지

의 발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중점연구할 기술 분야로 지난 해에는 고온 초전도, 첨단의료기계, 신형 디스플레이, 로봇을 열거했으나 올해는 마이크로기술과 고온 초전도 기술로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을 보여줌.
-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직접적 자금 지원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보다 치중함.
- 또한 2014년에는 2011년 국가급 자주혁신 시범단지로 지정된 장강(張江)시범구의 발전계획을 실천하고, 스톡옵션 시범사업을 심화하는 등 지역 특화된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광대역·무선(無線) 도시 건설 등 스마트 도시 관련 인프라 구축은 지속하면서 제2차 「스마트도시건설 3개년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스마트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을 추진할 계획임.
- 상하이 시는 2011년부터 3회에 걸쳐 「스마트도시건설 3개년 행동방안」을 제정·실시 중이며, 올해 제2차 행동방안을 제정할 계획임. 제2차 3개년 기간 동안은 스마트 기술을 경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응용하는 것을 목표로 할 전망이다.⁵⁾
- 이를 위해 △ 4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 사물인터넷·클라우드컴퓨팅·빅데이터의 응용 △ 디지털 선반·공업용로봇의 활용 등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스마트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표 3. 2013년과 2014년 상하이 시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경제성장

2013년	2014년
1-2. 중요산업프로젝트·지역 집중발전, 구조조정과 방식 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 *보험거래소, 국제선물, *원유선물시장, 어음시장 건설 추진, 헤드쿼터형, *기능성 금융기구의 유치 노력 강화, *루자쭈이-와이탄금융클러스터의 서비스기능 업그레이드, *해운금융-해상 보험-해사법률 등 첨단해운서비스기구 유치 지원 - 소비확대정책 심화 - 정보·전문·중개·첨단기술산업 및 생활형 서비스업 발전, 현대서비스업융합개혁시범사업 추진 - 차세대 IT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등 주요프로젝트 실시, 대형 여객기, 상용항공기 엔진 등 중대산업프로젝트 지원 - 조선기지와 자동차도시 등 산업기지의 집적발전 추진 2. 기술혁신시스템·인력풀 건설 촉진, 기업의 자주혁신능력 증강 지원 - 장강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스톡옵션, 과학기술 금융 등 분야 시범사업을 지원	1-2.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 2013년 4의 * 정책 유지 - 통관·검역 협력과 지역통관협력기제의 최적화 - 자본유치와 해외진출의 상호결합 원칙 견지, 대외투자 심의 비준제도개혁 심화 - 본토 다국적기업 육성 가속화 - 장삼각 및 장강경제지대(支撐帶) 발전에 적극 참여해 개방형 경제 발전 2-2. 국제 경제·금융·무역·해운의 ‘4대 중심’ 건설 가속화, 산업구조조정 추진 - 2013년 1-2와 8-1의 * 정책 유지 - 크루즈경제 등 첨단해운서비스업 발전, 선적항 세금환급 시범사업 범위확대 - 벌크스톡 상품거래 플랫폼 건설 - 전통상업과 전자상거래의 융합발전 촉진 - 세계 유명 관광도시 건설 추진

5) 中国城市文化网(2013. 11. 14), 「上海智慧城市建设未来三年行动计划」.

표 3. 계속

2013년	2014년
- *기초연구, 사회공익기술 연구 등 강화 - *기업주도형 산학연 협동혁신기제 건립, 국유기업의 R&D 투입 확대 장려 -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혁신자금 규모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 고온 초전도, 첨단의료기계, 신형 디스플레이, 로봇 등 하이테크제품의 연구개발에 역량을 집중 투입 - *해외 고급 인재 유치계획 등 지속적으로 추진 - 고급기능인이 기능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28%로 향상 - 창업융자거주자녀교육 등 고급인력의 관심분야에 대한 정책 혁신 4. 대내외 개방 확대, 대외개방수준 향상 - *헤드쿼터경제 발전, 다국적기업 헤드쿼터 발전 지원 정책 정비 - *외국자본의 신산업, 신업종 집중투자 유도 -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무서류화 시범사업 심화 - 정보기술업무프로세스바이오의약 R&D 등의 아웃소싱 발전 - 기업의 대외투자 장려, 자원, 본토 금융가구의 역외 서비스 제공 추진 - 장삼각지역의 교통·에너지·환경보호·관광·과학기술농업·지식재산권 등 영역의 협력심화, 장삼각통합발전 추진, 중서부, 동부, 홍콩·대만·마카오와의 협력 추진 7-1. 서비스 기능 향상,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 공공문화서비스 강화 - 애니메이션·게임·온라인 시청각 등 주요 문화산업기지 건설 추진 가속화, 영화TV·출판뉴미디어·연예(演藝)산업 발전 - 디자인도시 건설, 문화재산권 거래, 국제 문화서비스 무역 등 서비스 플랫폼 정비 - 국유 문화기업을 공사제(公司制), 지분제(股份制)로 전환 추진, 문화관광스포츠의 연동발전 추진 8-1. 도시건설관리 강화, 스마트도시건설과 도시안전 추진 - *항만, 공항, 내륙운하, 철도, 고가도로, 궤도교통, 터널 건설 가속화를 통해 현대화된 기초시설체계 정비 - #광대역 도시무선 도시 건설 추진, 광섬유 광대역 이용 가정을 80만 가구 이상 신규 확대, 디지털 도시관리, 디지털 시민혜택(惠民)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 정보·관광·헬스·체험소비 등 서비스류 소비 장려 3. 과학기술혁신 강화, 스마트도시·인재도시 건설 - 2013년 2-1의 *와 8-1의 # 정책 유지 - 장장시범구발전규획강요 실천, 스톡옵션시범사업 심화, 지역 특화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 마이크로기술, 고온 초전도 등 과학기술프로젝트 실시, 지식재산권 운용과 보호메커니즘 구축 - 스마트도시건설 3개년 행동방안 제정·실시, 4세대 이동통신망의 중심가 설치완료, 아시아·태평양·직통 해저광케이블 설치, 사물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의 광범위한 응용 촉진, 디지털 선반·공업용 로봇 등 스마트 제조 발전 - 혁신·창업문화 육성, 혁신창업 서비스 플랫폼 조성 5-1. 문화의 번영발전 촉진, 문화창조활력 증대 - 국유문화기업개혁 심화, 사회자본의 진입장벽 완화 - 영화TV 제작 및 발행영역 개방 확대, 문화·금융·과학·기술·교육스포츠·관광의 융합발전 촉진, 온라인 시청각·애니메이션·게임·디지털 출판·패션창의 등 사업 발전 가속화 - 국가문화 대외무역기지 건설추진, 문화상품 및 문화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상하이시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와 #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 「2014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구조조정

■ 부가가치세 범위 확대, 혼합소유제 경제발전을 통한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 중소기업 지원강화, 농촌의 재산권제도 및 토지제도 개혁 등이 구조조정 측면에서 중시됨.

-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增值稅)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의 영역을 2013년의 우편 통신(郵電通信)에서 2014년에는 철도운송, 우편서비스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의 경우, 혼합소유제 경제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우회적인 개혁 추진의사를 밝혔으며, 국유기업에 전문경영인제도를 새로 도입할 계획임.
 - 일례로 지난 3월 상하이 시 국유자산감독위원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상하이국제그룹(上海國際集團) 산하 기업인 상하이증권(上海證券)이 상하이의 대표적 증권사인 귀타이쥔안(國泰君安)에 51%의 지분을 인계함으로써⁶⁾ 국유기업을 혼합소유제 기업으로 전환함.
- 비(非)공유제 경제 활성화의 일환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의 감·면세 정책을 시행하고, 소도시 및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상의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며, 중소기업 직원훈련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건설할 계획임.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 개혁,⁷⁾ 토지경영권 등록 시범사업⁸⁾ 전개 등 전반적인 개혁방향을 유지하면서 재산권제도 개혁의 행정단위를 촌(村)급에서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진(鎮)급으로 확대하고자 함.

표 4. 2013년과 2014년 상하이 시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구조조정

2013년	2014년
1-3. 중요산업·프로젝트·지역 집중발전, 구조조정과 방식전환을 통한 경제성장 - *우쑹(吳淞)·가오차오(高橋)·타오푸(桃浦) 지역의 산업구조조정 촉진, *전통산업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 적극 추진, *고오염·고에너지소비·고위험형 낙후 산업 500건 퇴출 - 중심가의 '2대 증가, 2대 감소(雙增雙減)' 추진심화, #토지의 2차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원절약	1-3.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전면적인 개혁개방 심화 -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철도운송과 우편서비스업을 시범사업범위에 포함. - 국유자산개혁 심화, 국유기업개혁 유도, 혼합소유제 경제 형성 지원, 국유기업의 전문경영인제도 시행 - 비공유제경제 발전 장려·지원유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감면세 정책 시행, 향진 및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직원훈련 공공서비스 플랫폼 건설

6) 『证券时报』(2014. 3. 18), 「浦发银行证实拟收购上海信托」.

7)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 개혁은 기존에 진 또는 촌의 구성원 전체가 집체자산을 공동 소유하던 형태에서 벗어나 집체자산을 지분으로 전환한 후 개개인의 근로기간 등 특정기준에 근거해 지분비율을 환산하고, 집체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이 비율에 입각해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8) 토지(도급)경영권등록제도는 토지를 국가로부터 하청받아 농사를 짓는 농가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하청받은 토지의 면적, 위치 등을 등록하는 제도임. 농업부는 2014년 등록제도 시범사업 범위를 2개 성(省) 전역으로 확대하고, 모든 성에서 최소 1개의 현(縣)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향후 5년 내에 등록작업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新华网(2013. 12. 25), 「中国5年内完成农村土地承包经营权确权登记颁证」).

표 4. 계속

2013년	2014년
- #수자원관리 강화, #제5차 환경보호 3개년 행동계획 실시, 대기환경기준 PM2.5 강화, 교외 오수처리장의 개조 등 환경보호 - #녹지 1000헥타르, 임지 800헥타르 신규 조성 3-2. 우선시행(先行先试) 중시, 경제체제 개혁추진, 푸둥 종합개혁시범사업 심화 -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심화, *우편통신(郵電通信) 등 업종 포함, 재정 이전 자출 기제개선, 중기(中期) 예산관리체제 시범사업 전개, 재정지출의 실적평가 실시범위 확대 - 국유자본의 선별적인 진입과 퇴출, 국유자본의 영역 축소, 국유기업집단 상장을 추진 - 민간투자 영역과 범위 확대, 민간자본의 실물경제 발전 유도, 민영기업의 인수합병·구조조정·업그레이드 장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서비스체제 개선 등 비공유제 경제의 환경개선 - 기업신용분류감독관리제도 정비, 제품 품질, 온라인 상품거래의 감독관리 강화/공공신용정보 서비스 플랫폼 건설, 건설 프로젝트·식의약품 안전 등의 신용관리 강화 10-2. 도농통합 강화, 교외 신도시와 신농촌 건설 가속화 - 농촌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개혁 가속화 - 토지도급경영권 등록시범사업을 점진 확대 - 토지징발제도 개혁 - 도농 건설용지의 증감(增減)연계와 농촌 토지 정리 추진 - 토지에서 발생하는 부가수의 중 농민의 분배비율 인상	2-3. 국제 경제·금융·무역·해운의 '4대 중심' 건설 가속화, 산업구조조정 추진 - 2013년 1-3의 * 정책 유지 - 제조업의 전환과 업그레이드 촉진: 신기술, 신모델을 활용해 전통산업을 개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조치를 제정, 실시, 7-2. 도농통합발전 확대, 교외신도시와 신농촌건설 가속화 - 농촌개혁의 적극적·안정적 추진 - 촌급 집체경제조직의 재산권제도개혁 심화, 진급(镇级) 재산권제도개혁시범사업 전개 - 농촌토지(도급) 경영권 등록 전면 전개 - 도농통합형 건설용지시장 건설 모색 8. 자원절약, 환경보호 강화, 생태친화형 살기 좋은 도시건설 - 2013년 1-3의# 정책 유지 - 생태환경경계선(生态红线)제도 모색, 에너지절약평가심사제도 실시 - 탄소배출거래 발전 -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등 청정에너지 개발이용 가속화, 해양 환경보호 및 자원이용 강화 등 자원절약 강화 - 석탄화력발전소의 고효율 먼지제거와 탈질사업 완수, 배기가스 고배출 차량 7만 대 퇴출, 휘발성 유기물 및 먼지 처리 강화, 환경·공기·모니터링·예보능력 향상 - 토양환경보호와 종합처리방안 제정, 생활용 쓰레기 분리 감량범위 확대, 생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추진 - 소음·오염처리 강화, 환경보호와 처리제도 완비, 수원(水源) 보호와 손해배상, 책임추궁 강화 - 충밍(崇明)생태섬건설 추진, 신규 임지(林地) 2.3만 무(亩) 건설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상하이시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와 #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 『2014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기능을 강조하고,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 및 규제를 예년보다 강화하며 관련 정부지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

- 낙후한 석유화학, 철강산업 등의 설비 집중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한 가오차오(高桥), 타오푸(桃浦) 지역의 산업구조 조정과 고오염·고에너지소비·고위험형 낙후산업시설 500건 퇴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투·융자 체제를 혁신하고, 시장 기제 이용을 강조하는 등 시장의 기능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자원(토지,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대기, 수질, 토양오염 통제), 녹지조성 등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인 목표나 새롭게 도입될 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지출규모를 확대하여 이에 대한 지원 및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냄.
- 2013년에는 ‘녹지면적 확장과 효율 향상, 배기량과 오염 축소(雙增雙減)’의 추상적인 목표 제시에 그쳤으나, 2014년에는 자원절약, 환경보호, 녹지조성을 따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목표를 제시함.
-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4년에는 △ 평가심사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 탄소배출거래를 발전시키며 △ 해양환경 및 자원을 절약대상으로 새로 추가함.
- 환경보호와 관련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차량과 물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또한 새롭게 토양오염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생활용 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이 포함되었고, 환경모니터링 시스템과 손해배상, 책임추궁제도를 강화함. 생태환경경계선(生態紅線)제도 도입도 모색할 계획임.
- 정부지출예산에서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관련 지출규모를 2013년의 34억 위안에서 23% 증가한 41.8억 위안으로 확대해 모든 지출항목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⁹⁾

라. 사회보장

■ 교육의 내실화, 공립의원 개혁을 포함한 공공보건 서비스와 농민 수익증대, 거주증 제도 관리의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임.

- 의무교육과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민간 교육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함.
- 의무교육의 경우 지난해에는 교육기관 설립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를 중시했다면, 올해에는 학생의 과중한 숙제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함.
- 대학의 경우 대학의 경비사용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있으며, 민간인이 설립·운영하는 교육기관의 발전을 지원하고 교육의 국제화와 정보화를 추진할 것을 새롭게 천명함.
- 공립의원 종합개혁시범사업 및 중의약(中醫藥) 사업의 지속적 발전, 주치의 제도 추진 등 의료분야를 발전시키고, 공공보건서비스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공립의원 종합개혁시범사업은 2010년 상하이 시를 위시한 16개 시를 대상으로 공립의원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관리를 개선하는 사업임. 상하이는 교외 지역 주민도 양질의 공립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우수공립의원의 교외 이전 및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
- 중의약 사업 발전과 관련해 2014년 1월 「제2차 중의약 사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2016년까지 중의학 의료서비스 체계개선과 인력구조개선, 국제화 및 표준화 추진 등을 통해 상하이가 국내외에서 중의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임.

9) 『解放日报』(2014. 1. 26), 「上海市2013年预算执行情况和2014年预算草案报告」.

- 교통·건물·건설 등의 안전관리, 식품안전감독 강화, 불법건물과 무질서한 노점에 대한 종합 관리를 강화함.
- 농민이 농업 이외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신형(新型) 전업농업인¹⁰⁾ 지원정책을 제정해 농민의 수익 증대를 보장할 계획임.
- 한편 2013년 7월부터 발효한 ‘상하이 거주증 관리실행 점수누적제(上海居住证管理實行積分制)’¹¹⁾를 중심으로 한 거주증 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할 것임을 밝힘으로써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전망이다.

표 5. 2013년과 2014년 상하이시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비교: 사회보장

2013년	2014년
5. 민생 보장과 개선, 고용 적극 촉진 - *신규 일자리 50만 개 이상 확대, *1만 명의 창업 지원, *노사 관계조정(중재)기제 완비 - *양로금 증가, 취업자의 사회보험 참여방식 다양화, *도농 최저보장기준 향상, *양로 병상 5천개 확대, 10만 명의 고령자에게 가정도우미서비스 제공 - 보장성 주택의 신규건설과 노후주택 개조로 10.5만 채 확보, *중심시가지 인근 노후 주택 철거, *국가 부동산시장 조절통제정책 시행 6. 사회사업 개혁발전 가속화, 교육개혁발전 심화 - 도농기초교육통합사업 실시, 신규 유아원 30개 설립, 중심가 인근 교외지역에 의무교육학교 21개 설립, 의무교육 품질종합평가 개혁 추진 - 대학의 혁신능력 향상계획 실시, *평생교육 시스템건설 강화 - 공립의원 종합개혁시범사업 전개, 산부인과·소아과·노인간호 정신병 등 의료자원배치 강화, 주치의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중의약 사업 발전, *공공보건서비스사업과 건강도시건설 추진 - *‘30분 스포츠생활권 조성, 프로스포츠발전모델 탐색 7-2. 서비스 기능 향상,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의 발전, 공공문화서비스 강화 - 홍차오 국제무용 연예 클러스터 등 주요 문화사업 가속화 - 공공문화 시설의 무료개방 지속, 고품격 공익성 공연 250회 개최, 영업성 공연의 저가 공연을 통해 5만 명 혜택 - *지역사회 문화활동센터의 사회화전문화 관리, 대중 문화발전 지원, *제1회 시민문화제 개최, *중화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 보급	4. 민생 보장과 개선, 사회사업개혁발전 추진 - 2013년 5와 6의 * 정책 유지 - 시정숙화, 건물관리, 양로서비스, 농업 등 영역 취업 장려 - 도농민 기본양로보험제도 통일, 의료와 양로의 결합 촉진 - 보장성 주택의 신규건설 및 노후주택 개조로 11만 채 확보 - 의무교육 발전촉진, 초등과정 기준 개선, 고등교육의 내실화 촉진, 대학의 경비사용자주권 확대, 민간교육 지원, 교육의 국제화와 정보화 추진 - 공립의원 개혁추진 지속, 주치의제도 전면 실시, 일부 약품의 정량입찰 구매(帶量採購)를 시범시행, 제2차 중의약 사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 개시 - 충밍 국가급운동훈련기지 건설추진, 제15회 운동회개최 5-2. 문화의 번영발전 촉진, 문화창조활력 증강 - 2013년 7-2의 * 정책 유지 - ‘중국의 꿈’ 선전교육전개, 관용과 포용(海納百川)·도시정신(城市精神) 등 홍보, ‘문명화되고 예의바른 상하이’ 행사전개, 문화유산 보호와 사지(史志)건설 강화 -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체계 구축, 엑스포, 박물관 등 주요 문화시설 건설, 시민생활 속의 문화 구현 - 문화발전의 주체 다양화환경의 최적화법제의 건전화 형식의 다양화인재의 확대 추진

10) 신형 전업농업인은 현대적인 농업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 농업 종사자를 의미함. 중국 농업부는 2012년 「신형 전업농업인 육성시범사업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100개 시·현을 지정해 2014년 12월까지 현지 사정을 반영해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도록 지시함. 이 중 상하이시는 푸둥신구와 충밍(崇明)현이 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됨.

11) 연령, 학력, 전문성 등 지표별 점수를 합산해 120점 이상이 되는 외지인에게 상하이 시민과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5년 6월까지 시행됨.

표 5. 계속

2013년	2014년
8-2. 도시건설 관리 강화, 스마트 도시건설과 도시안전 추진 - 기업의 법정대표 안전생산책임제 실시, 소방시스템건설 추진, *교통·고층건물·지하공간 등의 안전관리 강화, 농산물 안전 추적 시스템 건설 추진, *식품안전감독 강화 - *도시관리 강화, 불법건물·무질서한 노점·불법 운송 등에 대한 종합관리 강화, 도심 생활쓰레기의 분리수거 및 감량 추진, 생활 쓰레기처리시설 건설 가속화 9. 체제·기제 혁신, 사회관리 강화, 사회관리기층기초 다짐 - *지역사회의 공동정치(共治)와 주민의 자치제도 수립 강화, 거주중 관리방법 정비, 실제 인구·주택·직장을 총괄하는 관리 기제 마련 -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의료분쟁·건물관리 등 영역의 조정 업무 주력, 신문고(信访) 업무 강화 10-3. 도농통합 강화, 교외 신도시와 신농촌 건설 가속화 - 100개 마을, 4만 가구 농촌의 생활오수처리시설 개보수 완성, *비농업분야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로 농민의 수입 증대 촉진	6. 도시관리와 사회관리 강화, 도시안정과 화합을 수호 - 2013년 8-2와 9의* 정책 유지 - 식품 원산지 추적제도 완비, 화재종합처리 강화, 홍수예방기초시설건설 강화 - '12345' 시민 서비스 핫라인 운영, 공공교통 우선도로 건설과 공공교통노선 네트워크화 추진 - 합법적·안정적 고용과 거주를 기준으로 한 인구서비스관리 강화, 점수 누적제(积分制)를 중심으로 한 거주증제도 엄중 실시 7-3. 도농통합발전 확대, 교외 신도시와 신농촌 건설 가속화 - 2013년 10-3의* 정책 유지 - 신형 전업농업인 지원정책 제정 - 농민의 택지(宅基地) 교환시범사업정책 정비, 고압선·고속철도·고속도로 등 중점지역을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대상범위에 포함.

주: 1) 정책 항목 앞의 번호는 정책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의미하며 볼드체로 표시한 부분은 상하이시의 특징적인 정책임.

2) 2013년 과제 중 *표시 과제는 2014년에 유지되는 과제임.

자료: 「2013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 「2014年上海市政府工作报告」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4. 평가 및 시사점

■ 상하이 시는 2014년 7.5%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자유무역시범구 조성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성장률 목표는 7.5%로 2013년과 같은 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고 있어 수치상의 성장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줌.
- 상하이 시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2011~2015년) 연평균 GRDP 성장률을 8%로 잡은 바 있으며, 현 추세로 간다면 12차 5개년 계획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상하이 시는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3대 요소인 투자, 무역, 소비 중 소비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투자와 무역 환경 개선을 중시하고 있어 투자와 무역에서 다양한 개혁·개방을 시도하는 자유무역시범구의 성공 여부가 향후 상하이시 경제 성장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 또한 국가급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역량을 투입할 수는 없으므로 상하이 시 정부는 단시일 내에 가장 파급효과가 큰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될 것임.

- 현재 상하이에서 추진 중인 대표적인 국가급 시범사업으로는 △ 상하이(중국)자유무역시범구사업 △ 푸둥종합개혁 시범사업 △ 장강(張江)자주혁신시범사업 △ 국제금융·해운중심 건설사업 등이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모두 푸둥신구에 집중되어 있음.
- 상하이 시의 경제규모가 전체 지역 중 12위, 4대 직할시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고는 하나, 제한된 자원을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투입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그러므로 우선은 중앙정부 및 각지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는 자유무역시범구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14년은 본격적인 시범구 조성이 이루어지는 첫 해이기 때문에 시범구에서 다양한 개혁·개방조치가 빠르게 시도될 전망이므로 금융을 위시한 서비스업 개방과 제도개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 자유무역시범구가 발족한 것은 2013년 9월 말이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조치를 시행하게 됨.
- 특히 시범구 발족 이후 3년 내에 조성을 완료해야하고, 연내에 2차로 시범구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발 시범구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상하이 시범구에서 단시일 내에 다양한 개혁개방조치를 시험할 것임.
- 2014년 상반기에 「네거티브 리스트(2014년판)」가 발표될 예정이며, △ 안전심사기제 △ 반독점 심사기제 △ 기업연차보고 공시제도 △ 신용관리시스템 △ 종합적인 법집행 시스템 △ 부처 간 감독관리정보 공유기제 등 감독관리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임.¹²⁾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단순히 서비스업종의 개방분야를 확대하거나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하는 일반적인 개발구의 성격이 아니라,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성격도 있음. 따라서 추가개방 업종과 함께 반독점 심사기제, 신용관리시스템 등 관리상의 개혁조치도 함께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2014년에 새롭게 강조된 스마트 기술, 대기오염·고체폐기물 등의 환경, 교육, 문화 관련 정책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국제일류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상하이는 첨단도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스마트기술의 보급과 응용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전망이므로, 4세대 이동통신망이나 사물인터넷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실제로 2014년에는 △ 「스마트 도시건설 3개년 행동방안」을 제정하고 △ 4세대 이동통신망을 시내 중심가에 설치하며 △ 최근 부상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클라우드 컴퓨팅·빅데이터 등을 광범위하게 응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음.
- 상하이 시가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시 정부의 환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와 규제조치에 유의해야 함.

12) 『解放日报』(2014. 1. 24), 「杨雄答记者提问实录」.

- 특히 2014년은 상하이시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제5차 환경보호3개년행동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환경사업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수자원, 대기오염, 고체폐기물 처리에서 산업구조조정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임.
- 교육, 문화 분야의 국제화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기관의 상하이 교육시장 진출과 해외문화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상하이 로컬기업과의 협력분야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음.
- 교육의 경우, 민간 교육기관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주체의 다양화와 국제화를 강조하고 있음. 이는 상하이 교육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적으로는 외국교육기관의 상하이 진출 유인(誘因)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문화에서도 △ 사회자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 영화·TV 제작 및 발행영역 개방을 확대하며 △ 문화상품 및 문화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므로, 우리 기업의 상하이 시 문화콘텐츠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KIEP